

“민생 예산” vs “포퓰리즘” 첫날부터 격돌

내년 예산안 심사 첫 회의...공무원 17만명 증원 경쟁 여 “국민께 질 높은 서비스”...한국당 “미래세대 부담”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첫 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며 야권의 협조를 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필두로한 야당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

이 작은 수준”이라며 “대신 현금을 나눠 주는 비중을 높였는데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 김광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내년에 중앙직 1만 2200명, 지방직 1만 2500명 등의 공무원을 늘리고 5년간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데 30년간 월급을 주면 얼마인지,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추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공무원 증원이 대부분 현상 필수

직에 한정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늘어난 공무원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증원된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지출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성장 기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경제, 불공정경제도 적폐청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특권·불공정 경제와 적폐청산의 인과관계를 물었다. 이에 김

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경제정책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둥을 받치는 것이 공정경제”라고 답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어지고 반칙, 특혜가 횡행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중심 경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018 예산안 심사 방안’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국당이 아전인수식으로 자료를 왜곡하고, 정략적 거짓 주장으로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7대 퍼주기 예산’의 진실은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당리당락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예산심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낙연 “전두환, 5·18 진압 무관치 않아”

예산특위 정책질의 출석... “철저한 검증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작전과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전군이 (진압을 위한) 합동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전두환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인가라는 손 의원의 확인성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러 손 의원은 전남도청을 포위한 당시의 병력 배치 상황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자위군 차원의 병력 배치로 보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이 총리는 “전면적 공격과 같은 인상을 받는다. 자위권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어쩔 수 없는 군사행동이 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정부 조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확인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조사에 임한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출석한 靑 보좌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불출석’ 놓고 설전

청와대 첫 국감...野 “고위직 잇단 낙마 해명해야”

6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북핵 위기, 잇단 인사 실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무엇보다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인사 실패를 주장하며,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 무시를 넘어선 국회 멸시”라며 출석을 압박했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조 수석의 불출석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기관증인인데, 먼저 쌓인 레코드만 같은 사유서를 반복하며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멸시, 국민 무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여당 소속인 지상욱

의원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을 옹호했던 속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며, “인사 관련 질의는 실장에게 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이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은 조원호 인사수석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잇따른 청와대의 인사실패를 지적하며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면서 경찰과 국정원 존안자료를 보느냐”고 물었다.

조 인사수석이 “세부 사항 공개는 곤란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만약 청와대 인사라인 인물 가운데, 나머지 2명을 추천한 인사가 있다면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전 “운동권 靑 장악”...임 “그게 질의냐”

〈희경〉 대통령실 국감 냉랭...임 “지방선거 출마계획 없어”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가 장악했다”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게 질의냐”라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강력 반박하면서 6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파행 직전까지 갔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내부는 주사파가 장악했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강령과 회칙을 보면 미국에 반대하고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다”면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전대협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은 북한의 대변인이

지, 대통령 보좌관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전 의원 발언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5·6공화국 때 정치군인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전 의원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전 의원이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남지사 출마설을 묻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게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다른 지역 출마) 그 역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丁의장 “개헌안 제출시 조문작업 착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등 세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에 실패하면 상당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어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1월 중 개헌특위가 자문위 개헌안 접수 및 헌법개정기초소위 구성,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 완성, 3월 국회의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일정표를 제시했다.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용과 투표를 측면에서 동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모든 정파가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단일안을 못 만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임제 권력구조에 대해 “개헌의 핵심이 분권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중임제나, 단일제나가 핵심은 아니다”며 “국회 신뢰가 높지 않아 내각제 추진은 지혜롭지 못하다. 순수한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헌 시 문 대통령도 적용받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새 헌법이 현직 대통령을 규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안 확정 전에 내년 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제 정파가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다”고 기대했다. 또 “양당제는 수명을 다했고, 다당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제는 양대 정당이 유리하고 사표가 많이 나오며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겠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며 소선거구제 개헌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당 152명 차 출당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

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져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져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져분 신청서에서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형호기자 khh@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인물이 있는 대학·인물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차소로 36